

제2회 동아시아 공동자원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
〈세션3〉 공동자원과 협력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2019년 2월 15일(금) 10:00-12:20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강당

“공동자원과 협력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세션에 대한 토론문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이항우. “알고리즘, 정동자본주의의 고정사회자본”

이광석. “‘피지털(physical)’ 계를 통해 커먼즈를 재사유하기”

조혜경. “공동자원의 재산권적 접근: 디지털정보자원 사례”

먼저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이항우 교수님과 이광석 교수님, 그리고 조혜경 박사님의 발표원고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 분의 발표문뿐만 아니라 토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게 된 참고문헌들도 제게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과학』에서의 “플랫폼 자본주의” 특집논문들(통권 제92호, 2017. 12)과 “데이터사회” 특집논문들(통권 제87호, 2016. 9)을 접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가웠고 제게 좋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1. 이항우. “알고리즘, 정동자본주의의 고정사회자본”

우선 이항우 교수님의 “알고리즘, 정동자본주의의 고정사회자본” 발표원고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자본』에서 칼 맑스(2015)는, 한편으로 노동과정이자 가치증식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생산물에 그대로 이전시키기만 하는 기계, 원료 등의 생산수단을 ‘불변자본(constant capital)’, 노동력의 지출,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통해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낳는 노동력을 ‘가변자본(variable capital)’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1회의 생산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중 일부만을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기계를 ‘고정자본(fixed capital)’, 자신의 가치를 모두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원료와 노동력은 ‘유동자본(circulating capital)’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자면, 기계는 불변자본이자 고정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음의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발표원고에서 인용된 마우리치오 라자라토의 말처럼 “현대 자본주의의 기계성(mechanism)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기계는 고정사회자본(constant social capital)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쓰고, 느끼는 방식을 지원”하며, 인간이 “비-인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 기계적 어셈블리지의 한 구성 요소”라고 본다면, 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잉여가치는 기계적으로 생산”한다고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분,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분, 고용관계에 속해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구분은 약화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인지 등을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constant social capital을 “불변사회자본”이 아니라 “고정사회자본”으로 옮기신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계적 잉여가치”와 “흐름의 잉여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constant를 “고정”보다는 “항상적”, “일상적”, “끊임없는” 등의 의미가 담기도록 옮기는 것이 어떨까 판단합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의 맑스의 범주, 그리고 자본순환과정에 대한 맑스의 논의를 유지한 채로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여전히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자본의 순환, 상품자본의 순환, 생산자본의 순환에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 재고를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가치 실현’ 문제)”(이건민, 2018a: 471)은 자본주의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플랫폼 자본이 소유·통제하는 지식과 정보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실현,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계획 등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구조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외부성에 고착됨으로써 (확대)재생산된다는 현실”(이건민, 2018a: 471)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 항상 꿈꾸어왔던 바를 이루기 위한 운동과 실천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맑스의 자본순환모형을 발전시킨 던컨 폴리(1982; 1986) 식의 구분에 따르자면, 순환의 각 단계가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회전시간의 각 요소들은 생산지체(production lag), 실현지체(realization lag), 재투하지체(recommittal lag)로 나눌 수 있는데, 플랫폼 자본주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의 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맑스의 범주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이 갖는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이론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정동을 항상적인 원료로 요구하는, 그리고 자본순환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항상적으로 기능하는, 또한 특정한 주기에 따라 갱신한다고 볼 수 없는 알고리즘은 통상적인 기계와 같이 불변자본이자 고정자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발표문에서 제시한 “모델 1: 알고리즘과 기계적 예측”과 “모델 2: 알고리즘과 정동자본주의”에서 전개한 논의에 따를 때,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한 해방의 기획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2. 이광석. “‘피지털(physital)’ 계를 통해 커먼즈를 재사유하기”

다음으로 이광석 교수님의 “‘피지털(physital)’ 계를 통해 커먼즈를 재사유하기” 발표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담론의 물질성”이나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강조한 논자들에 동의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 지식, 데이터, “디지털” 역시 “물질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지털 국면에서는 비물질 디지털계의 논리가 물질계의 질서를 압도해 현실 자원을 통제하는 힘을 점차 얻어나가면서, 때론 물질세계의 논리 위에 올라서려 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서술하셨는데, 디지털계 역시 물질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닉 스크니츠크 역시 Platform Capitalism(2017)에서 “데이터는 비물질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단적인 예로 “인터넷은 통틀어 세계 전기 소비량의 9.2%를 차지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조혜경. “공동자원의 재산권적 접근: 디지털정보자원 사례”

이어서 조혜경 박사님의 “공동자원의 재산권적 접근: 디지털정보자원 사례” 발표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21세기형 로더데일 패러독스의 위협이 증대한다는 점,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에 소유권의 성격을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유상이전 및 거래를 허용하고 재산권 활용권을 인정받은 공기업/사기업의 독립적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소유권이 설계될 경우 수탈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감시자본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 국가의 공익 독점 대 시장의 공리 독점의 이념적 대립구도를 극복하면서 공동자원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규범적 가치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동자원의 재산적 활용을 사회전체의 이익과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본주의적 소유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공유재산권 모델을 제안한 점 등이 인상적이었으며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전체의 이익과 분배정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공동자원으로서 디지털정보자원을 통해 생성되는 경제적 가치의 분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 정책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4.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유복지(commonfare)를 통해 커먼즈를 재사유하기”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유복지(commonfare)를 통해 커먼즈를 재사유”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common pool resources; CPR) 이론에서도, 데이비드 하비의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논의에서도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천연자원의 사례에서, 국지적인 구획이 설정되었거나 그렇게 설정되었다고 “상상된” 특정한 커먼즈의 경우 그 경계 “외부”에 대해서는 “배제·접근·참여 불가능성”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커먼즈의 주인은 누구인가?”,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등의 물음, 그리고 도시를 비롯한 공동자원의 소유, 관리, 거버넌스, 참여, 접근 등의 문제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커먼즈 또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 공유복지(commonfare)나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엇을 채울지는 미결정의,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유복지(commonfare)가 커먼즈를 재사유하고, 커먼즈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대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인클로저 운동은 (경제적) 효율성,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확대재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저성장’ 시대, 완전고용이 무너지고 일자리 창출의 가치가 커지는 시대에는 데이비드 하비가 말하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BD) 전략이 명시적으로 추구되며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알바레도, 샹셀, 피케티, 사에즈, 주크먼, 2018)이 잘 보여주듯이, 실제로 신자유주의 시기에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공자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민간자본의 비중은 점차 늘어난 경향이 발견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술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ICT 규제샌드박스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고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본소득, 보편적 사회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등의 공유복지(commonfare)가 유력한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기

본소득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부 기금의 마련은 (경제적) 효율성,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이름으로 공공자본을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기존에 시장화·상품화되지 않은 영역에까지 시장화·상품화하려는 흐름을 저지하거나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 11. 1).

둘째, 자본의 인클로저 운동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지적” 커먼즈 “들”의 수적 확대나 공간적 확장 전략은 지속가능하고 유망한 저항 전략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소유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색한 저의 논문(이건민, 2018b), 루돌프 마이드너의 스웨덴 임노동자 기금안에 내재된 길드 사회주의와 노동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권정임, 강남훈 교수님의 논문(권정임, 강남훈, 2018)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노동자소유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국지적인 특정한 커먼즈들 간에 사회 전체적인 이익, 공익과 긴밀히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단순한 확장 전략·모델은 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부 기금(사회자산 기금)에 기초한 기본소득이든, 제임스 미드 식의 공유지분권 설정에 기초한 기본소득이든, 개인소득세 등의 조세에 기초한 기본소득이든, 자연적·사회적 공유부 개념에 기반을 둔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커먼즈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서로 다른 규모와 위계에 위치한 다양한 커먼즈들의 병존과 지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세션의 제목에 “협력”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달 23일에 작고하신 에릭 올린 라이트(2000; 2004; 2005; 2006; 2013; 2015)도 강조하였듯이 시민사회, 자발적인 어소시에이션, 사회적 경제·사회연대경제·협동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의 의존성, 그리고 기업과 시장의 경제적 조정 역할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시민사회, 어소시에이션, 사회적 경제 조직, 노동자 소유 기업의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필요조건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는 커먼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권정임, 강남훈(2018).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사회경제평론』 57. pp.203~237.
- 마르크스, 카를(2015).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김수행 역. 2015년 개역판. 비봉.
- 알바레도, 파쿰도, 뤼카 샹셀, 토마 피케티,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엘 주크먼(2018).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장경덕 역. 글항아리.
- 이건민(2018a). “[서평] 지금 여기,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비판사회정책』 59. pp.463~474.
- 이건민(2018b).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투 트랙 전략”. 『월간 시대』 61. pp.62~75.
http://left-times.com/wp2/wp-content/uploads/2018/11/61호_이건민.pdf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8. 11. 1). “이러타 111회-2부. 세계불평등보고서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http://cdn.podbbang.com/data1/alternativ/irt11102.mp3>
<https://www.youtube.com/watch?v=3KSHJL8lnYI&t=14s>
- Foley, Duncan K. (1986). Money: Accumulation and Crisis. New York: Harwood Academic.
- Foley, Duncan K. (1982). “Realization and Accumulation in Marxian Model of the Circuit of Capital”. Journal of Economic Theory 28(2). pp.300~319.
- Srnicek, Nick (2017). Platform Capitalism. Polity.
- Wright, Erik Olin (2015). “Eroding Capitalism: A Comment on Stuart White’s ‘Basic Capital in the Egalitarian Toolki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32(4). pp.432~439.
- Wright, Erik Olin (2013). “Transforming Capitalism through Real Utopia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 pp.1~25.
- Wright, Erik Olin (2006). “Two Redistributive Proposals: Universal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Focus 24(2). pp.5~7.
- Wright, Erik Olin (2005). “Basic Income as a Socialist Project”.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pp.196~203.
- Wright, Erik Olin (2004). “Basic Income, Stakeholder Grants, and Class Analysis”. Politics & Society 32(1). pp.79~87.
- Wright, Erik Olin (2000). “Reducing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Real Utopian Proposals”. Contemporary Sociology 29(1). pp.143~156.



■ 이 글은 2019년 2월 15일, 제2회 동아시아 공동자원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 <세션3> “공동자원과 협력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세션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본 글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